

# KDF

## 민주주의 리포트

Issue & Review on Democracy

2022년 12월

제79호

# 오늘날의 '공정' 개념의 성찰과 '공화주의적 공정' 실현

임혁백

고려대학교

발행일 2022년 12월 20일  
발행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문의처 [edit@kdemo.or.kr](mailto:edit@kdemo.or.kr)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orea Democracy Foundation

한국민주주의연구소  
Institute for Korean Democracy

# 오늘날의 ‘공정’ 개념의 성찰과 ‘공화주의적 공정’ 실현

임혁백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이화여대, 고려대 교수, 광주과학기술원(GIST) 석좌교수로 재직하였고,  
세계정치학회(IPSA) 집행위원을 역임하였으며 대한민국 학술원상을 수상하였다.

본 글은 먼저 공화주의적 공정이론의 기본 원리는 무엇인가를 탐구할 것이다. 다음으로 민주화 이후 한국에서 공정사회의 실현을 억제해온 신자유주의적인 공정의 문제점과 능력주의에 기초한 신세습주의적 불공정을 논의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공정의 실현을 왜곡하는 신자유주의적 불공정과 신세습주의적 능력주의의 횡포를 시정하고 공화주의적 공정의 실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논의할 것이다.

## 1 머리말: 공화주의적 공정

공화는 私的인 것(res privata)에 반대되는 ‘公的인 것’(res publica, republic)이다. 공적인 것이 지배하는 국가는 공화국(republic)이고 공화국은 공화주의(republicanism)의 원리에 의해서 운영된다. 공화주의(共和主義)에서 공(共)은 ‘함께, 공동의, 다수’를 의미하며(이승환, 2004: 175), 화(和)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공정하게 공익을 추구하는 다원주의적 공존(和)의 뜻이 있다. 공익과 공공선의 추구, 사적인 것에 대한 공적인 것의 우위, 공적 시민들의 공동체에 대한 참여와 헌신, 시민들간의 상호인정과 존중이 공화주의의 핵심이다.

공화주의 하에서 ‘공적인 존재’로서의 공적 시민들(公民, public citizen)이 ‘공익’을 추구하고 실현하며, 공론장을 열어서 공적인 집단적사를 ‘공개적으로’ 형성하며, 공정하고 공평한 자원배분을 추구한다. 민주공화국에서 국민주권의 제도화 하드웨어를 세우는 것이 민주주의라면, 민주공화국을 운영하는 콘텐츠와 소프트웨어를 확립하는 것이 공화주의이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민주공화정이 대한민국 정체(政體)의 기본 틀이자 기본원리와 이념이라고 밝혔다.

분배적 측면에서 공화주의는 공정(fairness)과 공평(impartiality)을 추구한다. 공화주의는 분배적으로 공정(fair)해야 하고 절차적으로 공평(impartial)해야 한다. 공화주의 사회는 공정하고 공평한 분배가 이루어지는 공공성이 충만한 사회이고, 공화주의 사회에서 사회정의가 실현된다. 공화주의적 공정성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민주주의가 동반발전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소유적 측면에서 공화주의는 공유성(公有性, 共有性)을 추구한다. 공자는 천하위공(天下爲公)의 원리 위에 대동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이상으로 삼았다. 공자의 대동사회(大同社會)에서 공(公)은 ‘같이 한다’ 또는 ‘공유한다’(sharing)는 공(共)의 의미를 담고 있다.<sup>1)</sup>

공자는 대동사회에서 천하의 토지는 공공(公共)의 것이 아닌 것이 없고 개인의 사적 소유지는 없었다고 했다. 대동사회는 모자라는 것을 걱정하지 않고 고르지(均) 않은 것을 걱정하는 균분(均分)사회였다고 주장한다(孔子, “不患寡而患不均,” [論語], 季氏).

공화주의를 실현하는 기본 콘텐츠는 공정이다. 공화주의적 공정은 공화정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분배적 공정과 절차적 공평을 추구함으로써 달성된다. 또한 공화주의는 세금, 노역부과, 재판을 할 때 공정하고 공평해야 사회정의가 실현된다고 가정한다.

민주화 이전 독재정권은 민주주의 제도와 절차만 훼손하고 폐지하였을 뿐 아니라, 공정, 공평, 균분과 같은 공화주의 에토스를 억압하였다. 1987년 민주화로 제도로서의 민주주의는 부활했으나, 여전히 공정, 공평, 균분과 같은 공화주의적 에토스는 활성화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 원리인 시장경쟁 지상주의, 차별주의와 능력주의, 신세습주의에 의해 억제되었다. 2016년의 촛불혁명은 민주화 이후 심화된 한국사회의 불공정과 불평등을 시정하고 공화주의적 공정을 확립하라는 시민들의 함성이었다.

오늘날 한국사회의 공정성의 실현을 저해하는 기본적 요소는 세습주의적 가산주의(patrimonialism)와 시장지상주의적 신자유주의이다. 민주화 이후 한국의 공화주의는 시장적 효율성을 공공성의 우위에 두는 신자유주의에 의해 억제되었고, 권력을 사유화, 세습화하는 신가산주의에 침탈당했다.

본 글에서 먼저 다양한 공정이론을 살펴보고, 공화주의적 공정이론의 기본 원리는 무엇인가를 탐구할 것이다. 다음으로 한국에서 민주화 이후에 민주공화국의 기본 원리중의 하나인 공화주의가 부활, 발전하지 못하고 불평등, 차별, 신세습주의에 의해 억제되어온 원인이 무엇인가를 규명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화주의적 공정이 실현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것이다.

1) 공유란 소유의 공공성을 의미한다. 공유는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에 의해 접근 가능한 것’ 또는 ‘공동으로 공유하는 (sharing) 공공재’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임의영, 2003).

## 2 공정 이론

### (1) 공자의 대동사회 공정이론

공정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의 영원한 과제였다. 2500년 전 공자는 [논어] 季氏篇에서 대동사회에서는 공정한 분배를 통해 안전과 평화, 국민화합, 균분(均分)사회가 이루어진다고 설파하였다. “국가와 가정을 경영하는 자는 모자람(寡)을 걱정하기보다 고르지 못함(不均)을 걱정하고, 가난한 것을 걱정하기보다(不患貧) 안전하지 못한 것(不安)을 걱정한다. 왜냐하면 고르면(均分) 가난한 사람이 없고 서로 화합하는 사회에서는 모자람이 없고, 백성이 안전해지면 나라가 기울어지지 않고 안전해진다(有國有家者 不患寡而患不均 不患貧而患不安 蓋均無貧和無寡 安無傾, 『論語』, 季氏篇). 공자는 공정한 분배(균분)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가난하다고 느끼지 않게 하고, 국민화합이 일어나게 하고, 공정분배로 국민화합이 이루어져 백성과 국가의 안전과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 (2) 예수의 공정

예수는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마태복음, 20장: 1-16)에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선언함으로써 최약자에게 최대의 수혜가 가도록 해야 한다는 롤스(Rawls)의 공정 이론을 연상시키는 공정한 재분배를 2000년 전에 이야기하였다. 포도원 주인은 품꾼들의 노동시간과 기여도에 관계없이 품꾼들이 품위있는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임금을 평등하게 지급하였다. 포도원 주인이 노동자들이 일한 시간에 비례해서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노동시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평등한 임금을 지불한 이유는 모든 노동자들의 ‘기본적 필요’(needs)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본 소득을 제공하기 위해서였다. 예수의 공정분배이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계약은 공정하게 준수되나 능력주의는 인정되지 않는다. 먼저 와서 일한 노동자들이 포도원 주인에게 왜 능력없는 노동자를 제십일시에 고용해서 한 시간일한 대가로 준 값이 하루 종일 일한 능력있는 우리와 동일하냐고 항의했을 때, 포도원 주인은 나는 너희들과의 고용계약대로 품삯을 지불했으나 집에 가라고 했다. 포도원 주인은 너희들과의 계약을 이행한 뒤, 남은 부를 가난한 자를 위해 사용하는 선행을 하려하는 것을 너희는 왜 악하게 보느냐고 꾸짖었다. 포도원 주인은 계약적 의무를 이행한 뒤에 약자에게 불비례적으로 혜택이 가도록 하는 재분배활동을 하는 것은 공정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둘째, 포도원 주인의 분배원칙에 능력주의는 없었다. 포도원 주인은 능력에 관계없이 최약자에게 최대의 수혜가 가도록 분배하였다. 예수의 공정 분배원리는 능력이 떨어지는 노동시장의 열패자도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드워킨의 자원의 평등론이 함축되어 있다.

셋째, 예수는 개인적 존엄과 품위있는 생활을 가능하게 해 줄 수 있는 값(임금)이 공정한 임금이라고 주장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최약자에게 불비례적으로 많은 임금을 주어야 하는

이유는 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평등하게 존엄성과 품위를 지키는데 필요하기 때문이다.

공화주의적 공정의 개념화를 위해서 공자와 예수를 소환한 것은 두 성현이 공화주의적 공정을 이미 이천년 이전에 이야기했기 때문이다. 공자는 공정분배(균분)를 통해 안전, 평화, 균등사회가 이루어진다고 주장했고, 예수는 공정한 분배는 기회의 평등이나 능력주의에 따른 분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평등하게 존엄성과 품위를 지킬 수 있는 분배라고 주장했다.

### (3) 노직의 시장지상주의적 공정

노직(Nozick, 1974)과 같은 시장지상주의자들(libertarians)은 재산을 철저히 확립하면 분배문제까지 시장이 '공정'하게 해결해 줄 것이라는 시장근본주의적(market fundamentalism) 공정사회이론을 제시하였다. 노직(1974)은 시장은 그 자체로 정의(justice)이기 때문에 어떠한 특정한 분배나 재분배도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의 재능과 노동력에 대한 절대적인 사유재산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절대적 권리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유재산권은 생명과 자유의 권리에 못지않은 절대적인 권리이다. 노직은 재산과 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재산과 부를 '정당하게' 획득하고 이전했느냐이다. 그러므로 노직은 '정당하게' 획득한 개인의 재산과 부를 평등한 사회를 위해 국가가 강제적으로 재분배하는 것은 강도의 강탈행위나 다름이 없다고 주장한다.

결국 노직의 공정은 시장의 공정이다.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의 원리가 보여주는 것과 같이 사회 구성원이 분산적인 경제적 자원배분에 자유롭게 참여하여 이익과 손실을 부담하는 시장의 분배방식이 공정한 분배 방식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시장에서 허용되는 교환은 정의로운 교환, 즉 공정한 교환이기 때문에 어떠한 특정한 인위적인 분배와 재분배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국가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오직 개인의 자유로운 행위가 제약받지 않도록 하는 것뿐이다. 개인의 자유가 침해당했을 때 시장의 원리에 따라 왜곡된 정의를 바로 잡아 시장의 정의를 세우는 역할이 국가에 부여된다. 노직에 의하면 개인은 정당한 과정을 통해 획득한 재산, 생명, 자유에 대해 절대적인 권리를 갖고 있으며, 이러한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해야 된다는 '최소국가'(minimal state)를 주장한다. 노직은 시장적 분배가 '정당한' 획득과 교환에 따라 이루어졌다면 그 결과가 아무리 불평등하다고 해도 전적으로 정당하기 때문에 국가는 국방과 치안과 같은 최소한의 역할만을 수행해야 할 뿐 그 이상의 재분배적 기능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노직의 자유지상주의는 시장경쟁의 열패자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무시함으로써 불평등을 정당화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4) 존 롤스의 평등주의적 자유주의 공정

존 롤스(John Rawls)는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자'의 입장에서 공정을 논의하였다. '공정으로서의 정의'(justice as fairness)를 세우기 위해 롤스는 먼저 근본적 자유(fundamental liberties)를

모든 개인들에게 ‘패배시킬수 없는’(indefeasible) 권리로 보장한 뒤(자유의 원칙),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fair equality of opportunity)과 사회의 최약자(least advantaged members of society)에게 ‘최대의 혜택’(greatest benefit)이 돌아가도록 재분배하는 ‘차등의 원칙’(the difference principle)에 의해 공정성(fairness)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롤스는 타고난 재능과 능력도 사실은 공정한 조건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결과도 공정하지 않다고 본다. 귀족계급이나 카스트 제도는 출생에 따라 재산과 소득을 분배하기 때문에 공정하지 않다. 소득과 부의 분배가 계급과 신분적 행운에 따라 분배된다면 공정하지 않다. 롤스는 천부적 재능의 분배를 공동의 자산으로 생각하고 차등의 원칙에 따라 공동체에 속한 몫을 공동체에 분배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주장했다(신중섭, 2019: 154-155).

### (5) 샌델의 공화주의적 공정

샌델은 공화주의적 공정을 이야기하였다. 공화주의적 공정은 모든 사람에게 공공선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공정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조건을 보장해주고, 모든 사람들이 공공선에 평등하게 기여하고 있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기여적 정의’(contributive justice)를 확립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샌델의 공화주의적 공정의 핵심은 공공성의 실현에 모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국가와 공동체가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시민적 공화주의(civic republicanism) 공정이다. 공화주의적 공정은 기회의 평등이 공정하게 보장된 조건하에서 이루어진 분배는 공정하다는 신자유주의적 공정과 세습받고 교육받은 재능, 학습능력, 성취능력에 따라 성과를 배분하는 능력주의(meritocracy) 또는 신세습주의(neopatrimonialism)는 모두 ‘공정하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뿐 공정사회의 실현을 저해하는 ‘능력주의의 폭정’(The Tyranny of Merit)이라고 비판한다. 능력주의는 신분에 따라 분배하는 전근대적인 봉건적 귀족주의를 타파했지만, 능력의 세습에 기초한 불공정한 경쟁으로 세습적인 신가산제(neo-patrimonialism)와 신자유주의적 불공정사회가 결합한 세습적 신귀족주의로 재탄생하였다.

## 3 신자유주의와 신세습주의에 의한 공정의 왜곡

한국에서 외환금융위기 이후 권리와 과정의 공정을 중시하는 노직 류의 자유지상주의적 공정이론이 자원배분에 적용되었다. 그 결과 한국사회에 미증유의 불평등과 양극화가 일어났다. 신자유주의 시대가 지속되면서 한국사회는 양극화되었고, 중산층의 신화는 무너졌다. 계층 간 그리고 계급 간 격차는 말할 것도 없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간의 격차도 벌어져 한국사회는 그야말로 격차사회로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교육불평등이 심화되어 부유한 가정과 가난한

가정간의 교육비가 소득이나 재산 격차의 수십 배에 달하면서 교육격차가 발생하고 비싼 사교육을 받은 자녀들이 명문 로스쿨이나 의과대에 들어가 변호사와 의사가 되어 자신의 부모의 계급과 계층을 세습하게 되면서 불평등과 양극화가 젊은 세대 내에 극도로 심화되었다. 그 결과 젊은 세대는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였고, 그 결과 저출산 사회를 더욱 가속화시켜 3포세대(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세대)라는 말을 낳았다. 젊은 세대는 결혼과 출산만 포기하지 않았다. 부동산의 폭등과 스펙사회의 등장으로 3포에 더하여 집과 '경력쌓기'까지 포기하는 5포 세대가 출현하였다(임혁백, 2020).

3포와 5포 세대 젊은이들은 노직 류의 자유지상주의적 공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박근혜 정부 하에서 공정의 중심 주제에 '부, 권력, 지위의 대물림', '금수저, 흑수저론'과 같은 세습주의적 공정론이 더해졌다. 박근혜정부하에서 특권과 기득권의 성곽에 접근조차 금지된 저소득층과 노동자 집안의 자녀들에게 계급이 아니라 신분에 의해 불평등이 대물림되었다. 교육비의 양극화로 가난한 청년이 명문대학에 진학할 길이 막히고, 명문대학에 진학해서 변호사, 교수, 의사가 될 수 있는 길이 차단됨으로써 '개천용'은 더 이상 나오기 힘든 신분제 사회가 되었다. 금수저와 흑수저간의 격차는 계급격차를 신분격차로 발전시켰다.

2016년에 포스트 신자유주의 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영국의 브렉시트, 미국의 트럼프즘, 한국의 촛불혁명이라는 3대 세계사적 사건이 일어났다. 이 세 사건은 신자유주의 시대의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와 성공한 능력주의 엘리트와 전문가 집단에 대한 시장열패자인 블루칼라 노동자, 토착주민들의 문화적 반감이 폭발한 사건이다.

한국의 촛불혁명은 공정하지 못함에 대한 다중의 반란이었다. 촛불혁명에서 다양한 이질적 시민들로 구성된 다중(multitude)은 다양한 요구를 제시했는데 균등, 공정, 정의의 요구로 수렴되었다. 그래서 촛불혁명의 결과로 등장한 문재인 정부는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하겠다고 응답하였다.

문재인정부의 공정사회론은 롤스의 '공정으로서의 정의론'(justice as fairness)을 닮았다. 문재인 정부는 기회의 문을 활짝 열어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면서도, 출발점이 다른 경쟁을 하는 사람들에게 출발선을 맞추어 줌으로 불공정을 시정하여 공정경쟁을 보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능력자의 기득권을 인정한다면 능력자에게 선취점을 인정하게 되는 결과를 낳고 출발선에서의 평등(equality of start)이 실현될 수 없고 공정한 경쟁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정부의 공정사회 정책은 '정의로운 재분배'라는 결과를 창출하는데 급급하여 조급하게 이루어졌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들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러한 문재인정부의 공정사회정책에 대한 비판은 사회적 약자 보다는 기득권 층으로부터 더 강하게 분출되었다.

인국공(인천국제공항)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사태가 대표적인 능력주의자들의 반란이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6월 21일 인천공항 보안검색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공약을 이행하겠다고 발표하자 인국공 노조, 정규직 노동자, 청년단체 한국노총과

시민운동 단체들이 인국공의 불공정한 정규직 전환을 반대한다는 시위를 벌였다. 인국공의 결정을 반대하는 청년들은 정규직을 꿈꾸는 청년들이 넘쳐나는 정규직 노동시장에의 진입을 결정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 밖에 없다는 시장 경쟁을 주장했다. 청년들은 부모의 재력의 세습으로 인해 출발선이 달라져 '출발점에서의 평등'이 실현되지 않은 한국의 현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경기시작 후의 경기진행 규칙만은 공정해야 한다고 믿고 있었다. 인국공 사태 외에도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논의, 공공의대 신설 논란, 의사국시 추가 시험 허가 논란 등 사회 기득권과 능력주의자들이 불공정을 이유로 정부에 대한 반대운동을 주도하였다.

신자유주의 시대에는 노동계급과 프리캐리아트 비정규직 노동자들,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들이 부가 소수의 특권층에 집중되어 20 대 80 또는 1% 대 99%의 극심한 양극화 사회를 낳는다면서 신자유주의에 저항하는 공정 운동을 벌였다. 그런데 포스트 신자유주의 시대에 일어난 인국공, 동계올림픽 남북 여자하키 단일팀 구성, 공공의대 신설과 의사국시 추가시험허가 사건의 공통점은 불공정을 제기한 주체가 사회의 약자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기득권인 정규직 노동자, 국가대표선수, 명문 의대생과 의사들이었다는 것이다.

인국공의 경우 기왕에 정규직화된 노동자들의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의식이 내재해 있고,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에서 국가대표선수의 반발은 북한 선수에 대한 국가대표 선수의 기득권 수호가 은폐되어 있고, 시험을 치르고 입학한 일반의대 학생들의 파업과 의사시험거부는 시험을 치르지 않고 입학한 공공의대 학생에 대한 차별의식이 내재해 있다.

이는 불평등과 불공정을 호소하는 주체가 신자유주의적 불평등과 불공정의 희생자가 아니라 수혜자층에서 나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들은 노직이 이야기한 '과정의 공정'을 무기로 불공정한 분배를 초래하는 기득권의 능력주의를 수호하려하였다.

#### 4 공화주의적 공정의 실현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신자유주의적 불공정과 신세습주의적 능력주의의 횡포를 시정하고 공화주의적 공정의 실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첫째, 공화주의적 공정의 출발점은 모든 시민들이 평등한 조건에서 공동체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적 평등'을 실현하는 것이다. 루소는 엄청난 부와 권력의 불평등이 존재하는 조건하에서 시민의 정치적 권리가 보호될 수 없고, 시민들이 경제적 예속에서 벗어나 자신의 견해를 표현하고 개발할 수 없다고 했다.<sup>2)</sup> 그런데 루소는 부와 권력의 절대적 평등을 주장하지 않았다. 폭력을

2) 루소는 "어떤 시민도 다른 시민을 매수할 정도로 부자가 아니고, 어느 누구도 자신을 팔 수 밖에 없을 정도로 가난하지 않는다" 대체적인 경제적 조건의 평등이 시민들이 공동체의 일반의사의 형성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고 했다. Rousseau, *The Social Contract* p. 96.



행사할 정도로 권력이 불평등하게 배분되지 않고, 특수이익인 계급이익이 재산의 불평등한 분배를 좌우하는 계급사회가 되지 않는 정도로 대체적인 권력과 경제적 평등을 공화주의적 공정의 조건이라고 했다.

둘째, 현대의 정치철학자들은 다양한 공화주의적 공정의 조건을 창출하는 방법에 관해 이야기하였다. 드워킨(Dworkin)은 자원 평등권(equality of resource)을 이야기하였다. 자원 평등권이란 재산이나 기회를 평등하게 분배받을 권리가 아니라, 재산과 기회 분배 결정에 있어서 평등한 대우와 존중을 받을 공화주의적 권리이다. 드워킨은 장애와 재능같은 '선택할 수 없는 운'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정상적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자원을 사전적으로 분배해야한다는 '운 평등주의'(luck egalitarianism)를 주장했다. 운 평등주의를 통해서 장애인들도 시민적 공화주의에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센(A. Sen)은 '기본적 능력의 평등'(equal basic capabilities)을 이야기하였으며, 로머 (John Roemer, 1998)는 유형에 관계없이 '성취의 평등화'(equalization of achievement across types)를 주장했다. 판 파리스(Van Parijs, 1995)는 『모든 사람을 위한 진정한 자유』(Real Freedom for All)에서 "가장 방종적이지 않는 사람에게 최대의 선물"(maximal gift for the least indulged)을 주어야 한다면서 "보편적 기본 소득"(universal basic income: UBI)을 지속적으로 극대화해야 한다는 "보편적 복지론"을 주장했다. 센의 기본적 능력의 평등, 로머의 성취의 평등화, 판 파리스의 보편적 기본소득은 결과의 평등이 아닌 조건의 평등을 통해서 공화주의적 공정을 실현하려는 이론이다.

셋째, 오늘날 '공정'을 왜곡하는 '능력주의'의 횡포를 저지해야 공화주의적 공정이 실현된다. 능력주의는 소득과 재산은 출신 신분에 달려있고 세습된다는 봉건적인 '귀족사회'에 비해 개인능력으로 계층이동이 가능하고 개인의 노력만으로 성공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었다고 자부한다. 그러나 능력주의는 봉건적인 세습주의를 타파했지만, 실상은 능력의 세습과 세습에 기초한 불공정한 경쟁이 결합되면서 포스트 신자유주의 시대에 기득권의 귀족적인 신세습주의를 재탄생시키고 있다. 능력주의는 개인의 능력과 재능이 자신의 노력으로 성취한 것이 아니고 부모의 능력과 부모로부터 세습받았다는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 따라서 세습주의가 내장되어 있는 능력주의가 기회의 균등과 절차의 공정을 실현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허위의식일 뿐이다. 오늘날 능력주의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공정성'이 기득권의 시장열패자에 대한 능력주의의 전횡을 정당화하는 무기가 되고 있다.

능력주의는 성공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성공이 행운이 아닌 성취라고 인식하게 하면서, 자신의 성공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하고, 실패한 사람들은 실패를 자신의 능력과 노력 부족 탓으로 자책하면서, 실패를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으로 받아들여지게 한다. 이러한 능력주의는 성공한 능력자의 시장열패자에 대한 차별과 멸시를 정당화함으로써 사회적 결속력과 연대감을 약화시켜 민주적 통합을 약화시킨다. 능력주의는 시민들이 평등한 조건으로 공공선의 실현에 참여하는

공화주의적 공정의 실현을 저해한다.<sup>3)</sup>

넷째, 이러한 능력주의의 횡포를 저지하면서 공화주의적 공정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시장열패자들이 다시 공화국의 시민으로서의 긍지, 존엄과 자존감을 회복하도록 국가가 물질적인 사회적 기반을 제공하고, 시장열패자들이 패배주의와 숙명주의에 빠지지 않고 공동체에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공동체와 공공선에 헌신하는 시민으로 거듭날 수 공화주의적인 시민교육을 실시해야한다. 능력주의자들에게는 능력분 아니라 행운이 부의 분배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능력이 모든 것을 좌우한다는 오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일 자체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공화주의적 시민으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Sandel, 2020).

3) 샌델은 '유능력자 제비뽑기'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대학입시, 회사원 채용 과정에서 가장 민주적인 추첨방식을 채택하여 행운이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능력의 오만을 혼내주자고 제안한다.

## 참고문헌

---

- 신중섭, 2021. “공정과 능력주의에 대한 비판적 분석,” 『대한철학회논문집』, 8월호.
- 임의영, 2003. “공공성의 개념, 위기, 활성화 조건,” 『정부학연구』, 제9권(1).
- 임혁백, 2021. “‘우리 시대’의 공정: 포스트 신자유주의 시대의 공정,” 『철학과 현실』, 3월호.
- Dworkin, Ronald, 1981. “What is Equality? Part 2: Equality of Resources,” *Philosophy & Public Affairs*, Vol. 10, No. 4: pp. 283–345.
- Dworkin, Ronald, 2000. *Sovereign Virtue: The Theory and Practice of Equality*.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2000.
- Nozick, Robert, 1974. *Anarchy, State and Utopia*. New York: Basic Books and Oxford: Basil Blackwell.
- Rawls, John (ed. by Erin Kelly), 2001. *Justice as Fairness: A Restatemen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Roemer, John, 1998. *Equality of Opportunit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Rousseau, J. J., *The Social Contract*.
- Sandel, Michael, 2020. *Tyranny of Merit, What Becomes of Common Good?*. Farr, Straus, Giroux.
- Sen, Amartya, 2009. *The Idea of Justic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Van Parijs, Philippe, 1995. *Real Freedom for All: What (If Anything) Can Justify Capitalis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오늘날의 '공정' 개념의 성찰과 '공화주의적 공정' 실현

**발행일** 2022년 12월 20일

**발행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DF, Korea Democracy Foundation)  
한국민주주의연구소 (IKD, Institute for Korean Democracy)  
edit@kdemo.or.kr  
경기도 의왕시 내손순환로 132

이 리포트의 내용은 연구자의 견해로서 연구소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